

“여성계 정치대응력 약하다”

기초의회의 여성 진출이 예상보다도 저조해 여성계의 정치대응력이 허점투성이라는 지적과 함께 여성단체의 운동방향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천3백4명을 뽑는 이번 기초의회 선거에서 여성은 1%도 채 안 되는 40명이 당선됐다. 입후보자수도 전체 후보자 1만1백22명 중 1.2%에 불과해 열세를 면하지 못했고, 당선율도 30%를 밑돌았다.

한국여성개발원이 28일 발표한 ‘기초의회 여성의원 당선자 분포’에 따르면 여성의원은 △서울 22명 △경기 7명 △광주 3명 △인천 2명 △부산 2명 △대구 1명 △대전 1명 △전북 1명 △경남 1명 등이다. 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제주에서는 단 1명도 없다.

기초의회의원의 여성비율은 서울이 2.8%, 광주 2.7%, 경기와 인천이 각각 1.3%로 조금 형편이 나은 편이고, 나머지는 1%도 안된다.

수도권과 대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여성의원이 많은 까닭은 △2명 이상 뽑는 선거구가 상당수 있어 남성과 동반당선이 가능했고 △교육·공해·탁아·쓰레기문제 등 지역내 생활과 관련된 문제해결에 힘써온 지역활동가들이 대부분 당선됐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들 지역활동가를 비롯해 동

지역활동을 펴온 여성들이 기초의회에 여러 명 진출, 지역활동에 큰 비중을 두지 않던 여성단체에 자극이 되고 있다.



기초의회 1%미달...자체반성론 높아 후보배출·지원 미미 “운동방향 재정립 필요”

단위 부녀회장 출신 여성의원들은 대부분 여성단체와는 무관하게 지역활동으로 쌓은 지역연대감 덕분에 당선돼 여성단체활동의 반성론이 나오고 있다.

여성계는 30년 만에 부활되는 지방자치제를 놓고 한 목소리로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좋은 기회”라며 부산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후보배출, 선거기간중 여성후보를 돕는 일 등을 적극적

으로 해내지 못했다.

기초의회 선거가 갑자기 치러졌다는 시간적 촉박함이 따르긴 했지만 대부분의 여성단체들은 여성 후보의 선거사무실에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필요성’을 설명하는 홍보용 전단을 제작·전달해주는 선에 머물렀다.

‘더 많은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을 목표로 여성계 인사 1백3명이 참여해 지난 2월 발족한 ‘정

1명만이 당선됐고, 여성정치교육을 펴온 여성유권자연맹 등은 후보를 단 1명도 내지 못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한국여성민주회 이경숙 부회장은 “여성계가 후보발굴·물색 등 전반적으로 지방의회 선거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면서 “여성운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전략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여성단체연합 나영희 사무국장은 “여성의 지역의회 진출 활성화를 위해선 여성단체가 명망가 출신의 단체장 중심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지역활동에 뿌리를 둔 여성단체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유권자들의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 선거법 개정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4개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인 여성단체연합은 이번 기초의회 선거결과를 교훈으로 삼아 광역선거 실시 이전에 선거법 개정, 비례대표제·정당연기명투표제 도입 등 여성의 정치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현실여건을 타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YWCA, 여성단체협의회, 정치참여를 위한 범여성모임, 유권자연맹 등도 중선거구제·선거공영제·기탁금하향조정 등을 빼들고 한 선거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광역선거를 앞두고 여성계의 정치대응전략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신연숙 기자〉